

[종합·해설]

유해 수입물품 발 뜻 불인다

중국산 엘라민 식품 파동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 장난감 등 국내 소비수요가 크고 불법유해 물품 반입 가능성이 높은 7대 품목의 원산지표시 준수 및 가짜상품 끌어 여부가 집중 단속된다.

특히 이들 품목 중 유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위험경보 발령과 함께 국내 반입이 즉각 차단되고 통관 후에도 리콜(보세금 제반입 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23일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관련 정부부처 및 민간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수입물품 안전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선 식품, 의약품, 의류, 주방용품, 화장품, 신변장식용품, 장난감 등 7대 수입품목을 식탁·건강·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또 이들 7개 품목과 관련

■ 관세청, 식·의약품 등 7대 품목 안전대책 발표

통관 이후에도 리콜·유통이력 관리 체계 구축

서류 제출·검사 강화…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해 관세청은 사전예방, 단속강화, 신속대응 등 3대 핵심전략 단계별로 20개 세부 추진대책을 세웠다.

우선 관세청은 사전 예방 대책으로 수입업자뿐 아니라 해외 제조자, 창고업자 등 공급망의 범위 준수도를 측정해 위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업체를 선별해 통관심사 등을 특별관리 했다.

또, 불법유해 수입물품 적발 시 전국 47개 세관에서 즉각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고 식품, 의약품 등을 보관

하는 보세창고의 위생기준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준 위반업체는 즉각 재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원산지표시, 성분 사전등록 제를 신설, 원산지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강화 방침과 관련해서 관세청은 불법유해 수입품 상시단속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통관단계에서 서류제출비율(20→30%) 및 검사비율(6→12%)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사료용, 미끼용 등으로 유통을 전환, 다시 통관단계를 거쳐 시장에서 식용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비식용 통관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예 식용으로 신고해 겟액을 통과하지 못한 물품은 전량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신속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통관 후에도 국민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리콜 조치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보완하고 어린이용품, 비식용 통관물품 등 국민 안전 직결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후 유통이력관리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교섭단체 대표 문국현… 누구 편 될까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 대표를 내년부터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맡는 것을 놓고 정당별 회비가 엇갈리고 있다.

창조한국당이 진보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 때문에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내심 원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당사자인 선진당은 해마다 교섭단체 대표를 나눠맡기로 합의한 대로 당연히 문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서 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걱정도 적지 않다.

내년부터 교섭단체 협상에 참여하지 못해 입

지 위축이 불가피한 데다 창조한국당과 정체성이 달라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3석의 창조한국당이 제3의 교섭단체로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구심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공천현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 대표가 국회 운영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응부터 시작해 선진당이 문 대표를 배제할 모종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창조한국당과 야권 공조를 통해 동질성을 확보해오던 터에 같은 진

한나라·선진 "진보성… 우려"

민주·민노 "야권 공조… 희색"

영으로서 힘을 보태줄 교섭단체가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희색이 만연하다. 한 핵심당직자는 "지금까지 교섭단체 대표 회담에서 보수 대 진보 구도가 2:1로 밀렸다면 이젠 1:2로 역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은 정당별 엇갈린 반응에 폐념치 않고 교섭단체 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로 활동하려면 원내 전략이나 정책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하는 만큼 인력 재배치를 통한 정책실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도 '강기갑 구하기' 총력

'입법전쟁'서 의석수 한계 절감… 민노와 공조 강화

인물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이 탄원서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81명이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강기갑 구하기'에 동참한 것은 한나라당과의 '입법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양당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 대표와 강 대표는 지난 10월 만나 '야당탄압과 표적사정'에 공동대응키로 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일방 독주해 야당끼리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나라, 방송법 등 수정안 발표 지상파·유선방송 간 결영 허용

한나라당은 23일 최근 신문과 대기

업이 종합편성채널의 지분을 49%까

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

안을 수정, 30%까지만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2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수정안에서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결영 허용 조항도 신설할 방침인

〈완도 출신〉

李 대통령-가락시장 할머니 재회

'일하는 어려운 이웃' 250명 靑 초청 오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의 '무 시래기'가 청와대 오찬 메뉴로 등장했다.

청와대가 23일 연말을 맞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서민 25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완도 출신 박부자(72) 할머니로부터 무 시래기 구입, '우거지 갈비탕'을 만들어 대접했기 때문.

당초 이날 오찬 메뉴에는 갈비탕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날 이 대통령이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박부자 할머니는 이날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단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대통령과 나라가 잘 되길 매일 기도한다"고 말해 경제 위기 속의 '서민의 자화상'으로 떠올랐다.

당시 코끝이 찡해진 이 대통령은 "하다하다 안되면 연락하리. 대통령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다독이며 박 할머니에게 20년 동안 지냈던 목도리를 선물로 풀어줘 화제가 됐다.

박 할머니는 완도에서 가정을 이뤘으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이 사는 서울로 이사온 뒤 생계를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무 시래기 노점상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하는 어려운 이웃 초청 오찬'에서 지난 4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 때 목도리를 벗어 주었던 박부자 할머니와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힘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년 한해가 지나면 웃을 일이 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어려울 때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 노점상 최승매(여·43)씨와 청와대 경내에서 남편과 함께 구두수선을 하던 남편의 뇌종양으로 흔자신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이순희(여·36)씨도 초청됐다.

또 종로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청와대 인근 청소를 맡으면서 청장암으로 투병중인 노모를 극진히 간호하고 있는 정준섭(46)씨와 대구 서문시장 노점상 박종분(여·59)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으로 IPTV나 케이블TV가 활성화 될 경우 지상파 방송도 하나의 프로그램 공급자에 불과해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신문법에서 시장의 자본적 사업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방송 결영 금지 조항을 풀고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는 2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수정안에서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결영 허용 조항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 거제 마라톤대회

거제시 동부면 화동리 흑진주 봉동해변 주차장

【종목】 힐프리 10km, 5km, 3km, 1km

【일정】 2009년 2월 15일 일요일 10시 30분

【대상】 10km, 5km, 3km, 1km

【주관】 거제시립체육회, 거제시립체육회, 거제시립체육회

【부설】 10km, 5km, 3km, 1km

【부설】 10km, 5km, 3km, 1km